

빈곤의 경제철학

Philosophy of Economics on Poverty

박 상 수*

(Park, Sang-Soo)

목 차

- I. 서론
- II. 빈곤의 정의 및 계측
- III. 빈곤의 원인
- IV. 빈곤에 대한 원조의 논리
- V. 결론

I. 서론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실패 중의 하나가 바로 빈곤문제이다. 빈곤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며, 부국이나 빈국이나 모두 빈곤문제를 앓고 있으며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런 빈곤은 기후와 부존자원 같은 자연환경, 역사와 제도 등의 인간문명 등에서 기인하는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이기도 하다.

만약 모든 자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 있다면, 각자는 이런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빈곤에 처하지 않을 것이지만, 자원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배분됨으로 인하여 풍요 속의 빈곤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만약 바람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직하다면 어떤 방법이 활용되어야 하는가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원조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경제철학적인 논점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우선 II에서는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가를 분석하였으며, III에서는 빈곤이 발생하는 중대한 세 가지 원인, 즉 실업, 소득창출능력의 부족 및 개인의 선택을 살펴보고, IV에서는 빈곤의 원조에 대한 찬반의 논리들을 검토해 보았다.

II. 빈곤의 정의 및 계측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인간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자연권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된 자연권의 하나로 규정하기도 한다. Waldron 같은 재산권 이론가는 이런 권리를 일반권리(*general right*)라고 하였다(Ciocchetti, C., 2002, p.60)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것은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기본적 욕구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빈곤에 대한 정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빈곤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빈곤에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이 있다. 절대빈곤(*absolute poverty*)은 대체적으로 식량의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데, 물론 식량부족만이 절대빈곤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절대빈곤은 대체적으로 영양실조, 문맹, 질병, 더러운 환경, 높은 유아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생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빈곤은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희생된다. 특히 어린이들은 죽음으로까지는 안 가는 경우에도 영양실조에 따른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이 멈추어지거나 혹은 영양불균형에 따르는 각종 질환을 앓기도 한다. 이런 절대빈곤은 궁극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수입이 부족한 상태이며, 인류의 중대한 불행 중의 하나이다.

반면에 상대빈곤(*relative poverty*)은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빈곤에서 빈곤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사회보장이 제대로 안된 선진국에서는

절대빈곤 계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잘 확립된 선진국에서는 절대빈곤은 극히 예외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빈곤문제는 상대적인 빈곤, 즉 빈부격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빈곤층은 인도의 빈곤층보다는 엄청나게 잘 산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빈곤층을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가난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아마 인도의 중산층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

2. 빈곤의 정의와 측정

빈곤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정책당국자나 사회과학분야의 학자들과 인류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그리고 21세기 이후에도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 한 사회 내에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시간적 관점에서 빈곤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 경제적 관점에서 빈곤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빈곤에 접근하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 즉 능력과 사회적 배제 등이 있다.

1) 경제후생의 관점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대표적이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경제후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수량화가 가능한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데, 빈곤의 절대적, 상대적 및 주관적 개념이 사용된다.

우선 빈곤의 절대적 개념을 살펴보자. 생존의 기본적인 수단의 결핍으로 정의되는 절대적 빈곤은 생존의 기본적인 수단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에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빈곤은 어떤 생존기준에 의해 정의되는데, 이를테면 최소 칼로리 섭취량, 혹은 최소의 소비재 묶음을 얻는데 필요한 소득의 크기로 표현되기도 한다.(특히 이와 관련된 빈곤의 측정방법에 관해선 Tarp, F., et al., 2002를 참조하시오)

예컨대 세계은행은 절대빈곤을 하루 소득 1달러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음식, 주거, 의복 및 기타 다른 핵심적인 서비스(예컨대 교통, 공중위생, 건강 및 교육 등)에 대한 최소 욕구에 의해서 빈곤을 정의하기도 한다. 그리고 UNDP는 절대빈곤을 극단적인 빈곤(기본적인 음식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의 부족을 대변하는 빈곤)과 포괄적인 빈곤(음식 욕구와 음식 이외의 욕구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의 결핍을 대변하는 빈곤)으로 나누면서 전자만이 절대빈곤이라고 주장한다.(Wagle, U., 2002, p.156)

둘째로 빈곤의 상대적 개념을 살펴보자. 상대빈곤은 특정한 개인이 얼마의 소득을 갖고 있는

가에도 의존하지만 소속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의 소득을 갖고 있는가에도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생활표준은 계속적으로 변동하므로, 상대빈곤은 결과적으로 평균소득 혹은 중간소득의 비율 혹은 가장 낮은 소득 혹은 소비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상대빈곤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의 분포,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낮은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과 비교하여 얼마의 소득을 갖고 있는냐이다.

이런 접근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의 평균소득 혹은 중간소득의 일정비율을 벌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상대빈곤에 처해 있다고 간주될 것이다. 예컨대 후스(Fuchs, V.)는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50%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빈곤층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이 방법이 상대빈곤의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ibid., p.157)

마지막으로 주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빈곤을 측정하는 것이다.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조사자가 소득의 충분한 정도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답자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소득이 후생적 관점에서 '불충분', '좋음', '아주 좋음' 등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관적인 빈곤의 표준을 유도하려 한다.(ibid., p.158)

이런 주관적 빈곤의 측정 방법은 육구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측정방법이라고 평가되지만, 시간에 걸쳐서 비교가 불가능하고 또한 국가간 혹은 지역간 비교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조사 자료의 신뢰성의 결핍도 중대한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ibid., p.158)

2) 능력의 관점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능력의 빈곤(capability poverty)이다. 이 방법은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충분한 복지를 유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소비재를 증대시키는 데에 필요한 소득 창출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런 능력은 교육수준, 육체 및 정신 건강, 기술, 주거조건 등과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ibid., pp.158-9)

이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런 난점을 고려하여 능력의 빈곤을 문맹, 영양 실조, 기대 수명, 빈곤한 모자건강, 질병(특히 전염병), 실업 등에 의해 측정하려 한다. 이런 능력의 결핍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예컨대 영양 실조와 질병은 낮은 소득보다는 더 심원한 효과를 갖는다. 건강하면 낮은 소득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지만, 영양 실조와 건강의 상실은 낮은 소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스트레스, 정신 불안의 증대, 숙련 쌓을 기회의 상실, 자신감의 상실, 가족관계의 와해 등을 유발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능력의 결핍이 정말로 더 중요한 빈곤의 정의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양 실조, 기대 수명, 문맹률, 전염병 비율, 실업률 등은 능력의 빈곤을 측정하는 훌륭한 변수들이며, 그리고 국가간 비교에도 대단히 훌륭한 근사치라고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빈곤한 저개발국에서는 이런 통계자료가 쉽게 얻어지지 않고 있어서 절대빈곤을 측정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리고 능력을 소득 혹은 복지로 전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제도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3) 사회적 배제의 관점

적절한 소득을 갖고 있고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복지 개념에 포함되는 경제적, 정치적, 시민적 및 문화적 활동으로부터 배제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빈곤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은 빈곤을 정의하는 보다 포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현재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 자체도 통일되고 있지 않다. 대체적으로 그것은 개개인 혹은 집단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완전한 참여로부터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배제되는 과정을 지칭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낮은 소득, 불완전한 취업, 빈약한 주택, 가정의 스트레스, 사회적 소외 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빈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경제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현재의 사회제도가 질서가 개개인 혹은 집단에게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빈곤과 관련해선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받을 수 있는데,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는 사회제도는 인종 차별, 성차별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차별 등이다. 이런 차별에 의한 노동시장 참여 기회의 박탈은 소득의 감소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고 나아가서는 중요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든다.

다음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는 정치조직, 정당결성 및 투표와 같은 그런 정치적 활동이나 과정에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자금 결핍은 정치조직의 결성, 입후보, 캠페인, 심지어 투표까지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상당히 많은 차원에서 제약받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조치들이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무시되어진다. 왜냐하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욕구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적 및 문화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는 개개인이 사회적 조직, 회원 조직,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 문화적 집단으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문화적 집단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등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 크게 불리하게 되고, 그에 따라 빈곤에 허덕이게

만든다.(Wagle, U., 2002, pp.160-1 그리고 Brady, D., 2003, pp.723-5; Clark, C. M. A., 2002, p.420도 참조할 만함)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빈곤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회 제도적 장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정립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빈곤을 설명함에 있어서 경제력이나 능력만을 중시하는 설명에 비해서 대단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빈곤의 설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3. 인구나 식량부족 및 절대풍요

1999년 10월 전세계 인구가 60억 명을 돌파하였고, 전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하루 1달러조차도 소비할 수 없는 절대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인구 10억 명을 돌파한 인도에선 극빈층이 3억2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구도 빈국과 부국에서 불평등하게 증가한다. 즉 빈국에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정체되거나 혹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위 부익부 빈익빈이 인구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우간다, 니제르 같은 나라에서는 평균 연령이 15세이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평균 연령이 40세이고, 인구 증가율도 영(零)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60-70년대에는 녹색혁명에 의하여 식량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식량생산 증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 더욱 더 중요한 문제는 빈국에서는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상당수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부국에서는 식량이 과잉 생산되어서 남아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절대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부국의 사람들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각을 즐기기 위해 음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은 식물성보다는 동물성 음식이라는 데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추위를 피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멋을 내기 위해 옷을 사고, 멋을 부리기 위해 이사하고, 카메라, 비디오 등을 산다.

한쪽에선 굶주리고 있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의 실상이다. 동물성 식품을 식물성 식품으로 식생활을 개선한다면 식량문제가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선진국의 남아도는 식량을 빈국에 팔면 해결될 것 같기도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다.

왜 빈국의 사람들은 가난한가? 선진국에서 생산된 식량의 가격이 비싸서 빈국이 이를 사들이

지 못하기 때문이고, 각종 농기구와 관개시설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부를 빈국으로 이동시키면 빈곤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기도 하다. 이를테면 유엔에서는 선진국들에 대해서 국내총생산(GDP)의 0.7%를 빈국개발을 위해 내놓도록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는 나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선진국의 부를 빈국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다.

III. 빈곤의 원인

빈곤이 왜 발생하고 그런 빈곤이 왜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인 장기현상인가는 경제학자들에게 흥미로우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빈곤은 대체적으로 실업, 소득창출능력의 결핍, 개인의 선택의 문제 등 세 가지에서 근원하는 것으로 언급될 수 있다. 빈국의 경우에는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빈곤이 발생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로 부국과 빈국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빈곤을 중심으로 빈곤의 발생원인을 살펴보겠다.

1. 실업

일반적으로 단기적이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실직자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실직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빈곤으로까지는 빠져들게 하지는 않는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자리가 생기므로써 실직상태를 탈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실업은 기아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빈곤과는 다소 거리가 있게 된다.

그렇지만 장기간에 걸친 실업은 단기적인 경기적 실업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일자리에서 장기간 축출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는 데에 많은 곤경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은 장기간 실직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해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수혜하지도 못한다.

이런 실업은 통계상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실업이라고는 하지만 실망실업자이기 때문에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즉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으로써 실업대책

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빈국에서는 당연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절대빈곤에 처하게 된다.(Feldstein, M., 1999, p.38)

특히 빈국에서는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거의 벌어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경우를 로빈슨(J. Robinson)여사는 잠재적 실업이라고 하였다. 이런 실업은 특히 빈국의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런 잠재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절대빈곤에 허덕이게 된다.

2. 소득창출능력의 결핍

빈곤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빈곤한 개개인이 낮은 소득창출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창출능력이 낮다면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최저생계비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낮은 소득창출능력은 학교교육, 직업훈련 등의 부족 그리고 낮은 인지능력에서 기원할 것이다.

빈국, 부국을 막론하고 학교교육의 불충분은 개개인의 소득창출능력을 크게 제한한다. 빈국의 가장 중요한 빈곤의 원인이 교육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학교교육이 불충분하게 제공될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그리고 수혜자들도 여건상 교육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하여서 학교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수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낮은 소득창출능력의 또 다른 원인은 부적절한 직업훈련이다. 직업훈련은 직장 내에서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효율적이며,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실직되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채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실직자들을 위한 정부지원 직업훈련은 전문성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효과도 직장 내 훈련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능력(IQ)의 부족은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빈곤의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국의 빈곤층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더불어 병리학적인 기능장애(약물 오용,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도 낮은 소득창출능력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Feldstein, M., 1999, pp.39-40).

소득창출능력과 관련하여 부국의 절대빈곤 원인은 인지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원인에 기인한 절대빈곤의 감소는 구조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빈국의 절대빈곤의 원인은 학교교육의 미비, 교육 수혜의 어려움, 직업훈련 기회의 부족이나 전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국의 절대빈곤은 부국의 원조나 정부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부국의 원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빈국의 정부가 대부분 부패해 있어서 이런 정책을 실시할 의향이 거의 없거나, 정부가 부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정책을 실시할 의향이 있다고 했을 때에도 재정상태의 부실이 정책실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3. 개인의 선택

특히 부국에서 나타나는 상당수의 빈곤은 합리적인 비합리적인 개개인의 선택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개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벌기보다는 스스로 일을 안 하고 여가를 즐기(혹은 단순히 놀기)로 결정하였을 때, 개개인은 빈곤을 선택한 것이 된다. 부국에서는 이런 원인에 기인한 빈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므로, 실직상태에 있을 때 실직자들은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일을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부터의 기대효용보다는 일을 안 하고 놀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복지혜택으로부터의 기대효용이 더 높았을 때, 실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하기로 결정한다. 최근 서구 선진국에서 복지지출이 점진적으로 증대하면서 이런 원인에 기인하는 빈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Feldstein, M., 1999, pp.40-1)

IV. 빈곤에 대한 원조의 논리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도덕적인 이유, 즉 경제윤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빈곤에 대한 원조의 경제윤리는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이며, 찬반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며, 경제체제의 성격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1. 원조에 따른 희생의 도덕적 중요성

결론적으로 언급한다면 우리가 만약 다른 중요한 일들을 희생하지 않고 빈곤과 같은 나쁜 일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빈곤과 같은 나쁜 일들을 막아야 한다. 즉 빈곤을 막는 데에 따르는 희생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빈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빈곤을 막아야 한다.(Singer, P., 1993, pp.271-5)

우리가 빈곤과 같은 나쁜 일을 막아야 하는 경우에 우리에게 증대한 희생이 요구된다면, 빈곤을 막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예를 들면 빈곤 퇴치를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한다면 본인 자신이 빈곤에 처한다거나 혹은 빈곤 퇴치에 앞장서다가 자신의 생계수단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빈곤 퇴치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빈곤을 막기 위하여 많은 돈을 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으면, 즉 자신의 희생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한다면 빈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방치라고 하는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예컨대 깊은 연못에 어린이가 빠져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옆을 지나가는 어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린이를 구출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깊은 연못이기 때문에 헤엄을 칠 수 있고 구조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어린이를 도와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희생은 옷이 더러워지고 자신의 어떤 볼일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구하지 않는다면 어린이는 생명을 잃을 것이므로 그 희생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러나 수영을 못하고 구조할 도구도 없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즉 어린이의 구출은 고사하고 본인도 익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어린이의 구출에 따르는 희생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빈곤에 대해서 원조할 것이냐의 문제는 자신의 희생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때 자신의 희생은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2. 이웃의 논리

인간의 본능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우려는 경향을 갖는다. 예컨대 자식이 굶고 있다면 자신의 식량을 자식에게 먼저 줄 것이다. 그리고 자식이 넉넉하게 살고 있다면 눈에 띄는 이웃의 빈곤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Singer, P., 1993, pp.275-6) 이것은 연못에 어린이가 빠져 있을 때 지나가는 이웃이 구조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다른 마을의 연못에 어린이가 빠져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조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빈곤에 대해선 상당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기근에 대해선 어느 정도 무관심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즉 인간적인 정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이 절대빈곤에 빠지는 경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

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웃의 논리는 빈곤에 대한 관심이 가깝고 아는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멀리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빈곤에 대해선 관심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모든 빈곤을 동일한 선상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웃의 논리를 보다 확대 해석해 보자. 가까운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서로 얼굴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간적인 정 때문에 도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는 그 반대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보험의 논리와 비슷하며, 보험의 발생도 사실상 바로 이런 논리에서 출발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서로 얼굴을 모를 정도로 이웃의 범위를 확대했을 때에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선 그들의 이웃이 도와야 하며, 우리가 도와야 할 윤리적인 의무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웃이 안 도왔을 때에는 그들의 이웃이 빈곤의 방치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겠다.

이웃의 논리는 궁극적으로 빈곤의 방치이라는 윤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아는 사이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빈곤의 방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게 되며, 그 책임은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게 된다. 즉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이웃이 도울 수 없을 때 빈곤의 방치의 책임은 누군가에게 있어야 하는데, 최종적인 책임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위임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의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자선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사회보장제도는 원래 소득재분배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구빈법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Hayek, F. A., 1960, p.285를 참조하시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면 빈자를 도와야 하는가에 대해선 더욱 의문이 커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웃의 논리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면 도울 수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하게 된다. 만약 돕는다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 돕는다면 모르지만 개인적 차원의 도움은 윤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만약 꼭 돕고 싶다면 유사한 인종이나 이웃 국가를 먼저 돕게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국가들을 돕기보다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을 먼저 도우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동체주의는 “우리가 모두에게 최저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의무를 아직도 갖고 있다”(Etzioni, A., 2002, p.577)라고 주장한다. 이런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가치, 공공심

(public spirit)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속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겠다. 그 결과 이웃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들의 빈곤에 대해선 원조의 도덕적 의무감이 크게 감소한다.

3. 재산권이론과 원조의 필연성

사회주의적 재산권이론에서는 사회의 부는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의 일부를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도출될 수 있다. 공산주의적 재산권이론에서는 무소유적 재산권이론이므로 당연히 빈자를 도와야 할 것이다. 즉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재산권이론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부는 공유이거나 아니면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므로 사회의 부를 이용하여 빈자를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치부될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이론에서는 사유재산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획득되었다면 그 재산권은 정당하며(Nozick, R., 1974, pp.150-153), 빈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거대한 부를 소유할 자격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여도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것이다. 특히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은 자발적인 자선이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윤리적 의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사유재산권의 정당성은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는 자신의 능력이나 기여, 노력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는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의 도움,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의 노동, 사회제도의 도움, 자연적 환경, 기타 행운 등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부에 대한 자신의 순수한 기여는 극히 미미할 수 있다.

자신의 기여가 매우 적고 오히려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부가 분배되는 상황에서 신성불가침의 재산권(소위 자연권으로서의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절대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부에 대한 자신의 기여가 매우 적다는 것은 부의 대부분이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사회를 위해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빈자를 돕는 데에 써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4. 인구 폭발과 원조 의무

말더스의 인구론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빈국에서는 식량의 증가에 비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빈곤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빈국에 대한 원

조가 인구를 더욱 더 폭발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인구는 일반적으로 3단계를 거쳐서 변동한다고 한다. 첫째로 매우 가난하고 근대 의학의 혜택을 못 받는 국가에서는 출산율도 높지만 사망률도 높아서 인구 증가가 정지된다. 둘째로 현대 의학이 도입되고 공중위생이 개선되면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셋째로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교육의 확대, 여성해방과 여성 고용 등으로 출산율이 낮아진다.

빈국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원조를 통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이 원조를 할 필요가 있다. 즉 한정된 원조의 재원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나라들을 도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빈국에 대한 원조가 오히려 인구를 더욱 증가시키고 그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 앞에서 언급된 첫째와 둘째 단계의 빈국들이 해당될 것인데, 이를테면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주변의 국가, 방글라데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한 원조는 오히려 인구를 더욱 늘리고 나중에는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차라리 방치하자는 원조 반대 견해가 등장한다. 이 견해는 현재 빈곤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아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인구가 조절될 수 있다는 맬더스적 인구론의 내용 그대로이다.

소위 “구명정 윤리”(lifeboat ethics)가 적용된다. “부자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바다에 떠있는 만원인 구명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과 같다. 만약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 보트에 그들을 태운다면, 우리 보트는 인원이 초과되어 우리 모두가 익사할 것이다. 전부 죽는 것보다는 몇이라도 살아남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므로.....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Singer, P., 1993, pp.279-280)

이런 식의 논리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분명히 미래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지만, 돕는 방법을 개선한다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소위 단순히 식량을 지원하는 원조방식을 지양하고 원조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조가 단순히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조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원조의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빈곤문제의 해결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식량을 원조함과 더불어 경제적 안정을 도모시키고, 교육을 개선하며 그리고 피임방법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인구증가율도 낮추고 빈곤도 퇴치할 수 있다.

V. 결 론

빈곤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등장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느 사회이든 항상 빈곤에 대한 문제에 봉착한다.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현재 인류의 지식과 제도로는 불가능하며, 단지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인류가 현재 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느냐는 곧 경제윤리의 문제인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빈곤 문제를 악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반대의 논리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원조에 따른 도덕적 희생이 그리 크지 않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원조에 따른 도덕적 희생이 너무 크다고 한다면 그런 원조는 도덕적으로 강요하기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원조에 따르는 도덕적 희생이 적다고 한다면, 이웃의 논리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공동체주의는 이런 논리가 가장 적합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원조의 의무가 희박해질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웃의 논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가까운 이웃이 아닐 경우, 혹은 가까운 이웃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론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재산권이론이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당성이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정당하게 획득했다고 해도 그 사물은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만에 의해서 얻어졌다기보다는 조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도움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물이 자신의 소유이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명정 윤리에 따르면 유한한 자원을 빈곤의 퇴치에 쓰다 보면 인류 전부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원조의 도덕적 희생이 적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보지만, 구명정 윤리는 그런 도움이 인류 전체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원조는 오히려 빈곤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원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자활 의지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원조한다면 이런 질곡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rady, D.(2003), "Rethinking the Sociological Measurement of Poverty", *Social Forces*, 81(3), pp.715-51.
- Burkitt, B.(1984), *Radical Political Economy: An Introduction to the Alternative Economics*, Wheatsheaf Books Ltd.
- Ciocchetti, C.(2002), "The Attraction of Historical Entitlements," *Journal of Value Inquiry*, vol.36, pp.59-71.
- Clark, C. M. A.(2002), "Wealth and Poverty: on the Social Creation of Scarcity", *Journal of Economic Issues*, 36(2), pp.415-21.
- Cotter, D. A.(2002), "Poor People in Poor Places: Lo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Household Poverty", *Rural Sociology*, 67(4), pp.534-55.
- Etzioni, A.(2002), "Are Particularistic Obligations Justified?: a Communitarian Examination", *Review of Politics*, 64(4), pp.573-98.
- Feldstein, M.(1999), "Reducing Poverty, not Inequality", *Public Interest*, pp.33-41.
- Hausman, D. M. and McPherson, M. S.(1993), "Taking Ethics Seriously: Economics and Contemporary Moral Philosoph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XXXI(2), pp.671-731.
- _____, (1996), *Economic Analysis and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ek, F. A. (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김균 역: 『자유헌정론 I, II』, 자유기업센터, 1997), Routledge & Kegan Paul.
- Nozick, R.(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Blackwell.
- Sen, A. (1987), *On Ethics and Economics*, Blackwell.
- Singer, P.(1993), *Practical Ethics*(황경식, 김성동 역: 『실천윤리학』, 철학과현실사, 199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rba, J. P.(1998), "Social Justice" in *Economics, Ethics, and Public Policy*(ed. by C. K. Wilber),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8, pp.187-215.
- Tarp, F., Simler, K., Matusse, C., Heltberg, R. and Dava, G.(2002), "The Robustness of Poverty Profiles Reconsidered",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1, pp.77-108.
- Wagle, U.(2002), "Rethinking Poverty: Definition and Measurement",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4, pp.155-66.